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보 2005년 9월



기고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

홍 성 태(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평가위원장)

전 세계에서 연간 쏟아져 나오는 백만 편 수준의 의학논문은 일일이 다 읽어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을 뒤져보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비슷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여럿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같은 결론을 기술하는 논문의 경우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먼저 출간된 논문이 갖는다는 선취권 원칙이 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제공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여 의학분야의 국제 논문의 제목과 영문초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검색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학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좋은 논문이라도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인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정보망에 등재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제적인 학술지들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와 미국 ISI Thomson사에서 제공하는 SCI를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KoreaMed를 통하여 영문초록과 저자, 저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문을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문으로 발표되는 논문을 외국에서도 쉽게 검색하여 영문초록 뿐만 아니라 도표까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동안 국내 학술지가 대부분의 논문을 국문으로 발표하면 서도 영문초록과 영문 도표를 작성하여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문 논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색인정보망인 PubMed나 SCI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표하는 학술지를 등재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므로 국제 색인망에 등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 중에서 국내 학술지에 원저 논문을 내고 이를 다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스스로 그러한 행위가 아주 능력있는 학자로서의 자질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 하거나 부러워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는 생의학 학술논문의 통일양식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이차출판의 요건을 명시하여 원저 논문의 선취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원저일 것을 요구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이차출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1) 일차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은 일차출판 논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이차출판은 축약판으로 충분하다.
- 4) 이차출판은 일차출판의 자료와 해석을 가감없이 성실하게 기술한다.
- 5) 이차출판될 논문의 표지에 이 논문이 이차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서 독자, 상호심의자, 색인자 등이 알도록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출판은 이차출판이 아니라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저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음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중복출판을 하게 되면 학문윤리에 어긋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쉽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가 가지므로 일차 출판된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 이차출판 학술지의 경우 모든 학술지가 투고 시에 원고와 함께 요구하는 서식, 즉 ‘이 논문을 타지에 게재한 적이 없고 게재 거부되지 않는 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이 선취권과 저작권이 다른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알지 못하고 출판하였다면 아무리 독자층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도 독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사전 상호심의가 부실하였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거짓말에 속은 것이 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계속 승인하였다면 원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논문을 출판하여 학술지의 격이 떨어지고 편집권을 포기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나라 일부 학자들이 관행처럼 국내 학술지와 외국 학술지에 이차출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같은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모두 온라인으로 웬만한 국내 학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출판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되는 경우 외국 학술지 논문 한 편으로 생기는 이득에 비할 수 없는 크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쉽다.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직인생략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우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 798-3807 / 팩스 794-3148 / hbear@kams.or.kr

문서번호 의편협 제 2006-01 호

시행일자 2006. 4. 3.

수 신 각 회원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참 조

제 목 중복출판(이중게재)에 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입장

1. 귀 학술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28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협으로 약칭)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된 workshop에서 중복출판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으며, 토의석상에서 KoreaMed 논문입력이 본 궤도에 이른 현재에도 이중게재 가능성이 있는 논문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3. 의편협은 이중게재가 학자의 윤리적인 문제인 동시에 국내 의학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의편협 모든 회원에게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도록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의편협은 우선 회원학술지에 이중게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하였으며, 조속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KoreaMed 등재학술지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조사와 아울러 제재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합니다.

5. 회원학회 학술지 편집인께서도 중복출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술 논문의 접수와 심사 및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장 박찬일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

1997년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는 N Engl J Med, Lancet, JAMA, BMJ 등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심이 되어 의학 논문 작성과 편집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권위있는 기구로서 본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 <http://www.kamje.or.kr>)에서도 회원학회에게 이 『통일양식』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지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MEDLINE/Index Medicus, <http://www.pubmed.org>)와 국내 주요학술지 115종에 게재한 논문 12만 건이 등재되어 있는 의편집의 KoreaMed (<http://www.koreamed.org>)의 동시 검색이 가능하게 된 이래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문 이중게재에 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논문의 이중게재 문제에 대해 의편집이 최근에 마련한 권고 사항을 존중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 하오니 회원학회에 소속된 의학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이 사안에 대해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 래

1.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 규정 -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 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3.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회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
5. 이중게재의 명을 면하기 위해,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6. 현 시점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 (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2006년 7월 11일

대한 의학 회장

의학논문의 출판윤리준수 선언

대한의학회와 의문협회는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의학 발전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의학연구,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가치관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의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는 의학 논문의 발표에 있어,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문협)는 2008년 1월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어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규정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3.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 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
5. 이중게재의 명예를 면하기 위해,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6. 현 시점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과 가이드라인이 회원 학회와 연구 현장에서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에게 널리 전파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출판윤리에 관한 본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대한의학회와 의문협회는 위에서 정한 6개 항의 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스스로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 본회는 2006년 7월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 즉 출판윤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기의 이중게재와 중복출판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되, 2006년 이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학문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학계의 반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다만, 의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특성상 판단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검증은 언론기관이나 정치권 보다는 학문적인 권위를 갖춘 학술단체에서 담당해야 함을 천명한다.

2009. 3. 19

대한 의 학 회